

지방소멸 대응... 특별한 빈집정책 추진

전북자치도, 2025년 행안부 빈집정비사업 국비 14억 확보 도시·농촌·어촌 실태조사 일원화 통한 관리체계 마련

수도권 집중화·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한 빈집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1976년부터 노후·불량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빈집 3만8,672동을 정비하였고 올해는 93동에 대해 마무리 정비중에 있다.

2015년부터는 활용 가능한 빈집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귀농·귀촌, 외국인근로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비된 빈집 부지를 활용한 공동주택, 마을쉼터 등 주민편의공

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882동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93동에 대해 정비 및 조성중에 있다.

또한, 빈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방차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리모델링 지원으로 지난해까지 2만8,334동 정비했고 올해는 530동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다. 올해는 복원기금 16억원을 확보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에는 15억원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빈집 정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표해 전국에 전파

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7월 국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고, 전북자치도에서는 2024년도 사업으로 5개 시군 총 50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비 14억원을 확보해, 지방비를 절감하고 국비 활용을 통한 빈집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 관련 법령 및 부처 이원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빈집 통계관리에 대해서 2024년도 빈집 행정조사를 통해 일원화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8월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올 2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빈집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올 8월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3개 부처(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를 포함한 빈집 TF 구성에 발맞춰, 전북자치도에서도 지난 1일 행안부 빈집

TF팀과 합동으로 14개 시군 빈집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빈집 현황조사를 마무리해 통계관리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속적인 빈집 정비 및 체계적인 통계관리와 함께 자진정비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시책으로 추진중인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주거공간 제공 시 빈집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에 건의하여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위험하고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빈집 발굴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목적의 공간으로 정비하여 지역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부 쌀값 정책 실패... 특단 대책 마련을”

농민단체·민주당·진보당, 공동 기자회견 열어



쌀 수확기에 접어들어 한 달동안 2024년산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농민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조희성 회장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김명기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주철현·윤준병·임호선·문금주·문대립·이병진·임미애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금 현장의 위기감은 단순히 낮은 쌀값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9월, 10월, 11월 정부의 잇따른 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시장에서 쌀값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9~2010년 쌀값 폭락, 2015~2017년 쌀값 폭락, 2022년의 쌀값 폭락 모두 시기를 놓치고 ‘필름’ 격려, ‘잠깐’ 격리로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한 결과물”이었다면서,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농정실패와 쌀값폭락을 책임질 것 △2024년산 쌀에 대한 연중 가격 목표 제시 및 추가 시장격리 등의 대책 마련 △농협의 쌀값 대책 마

련 동참 △반복되는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정부의 조기격리 조치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농정실패로 인해 시장이 정부 발표를 불신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쌀값을 더 떨어뜨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생길 정도”라고 꼬집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1년 피땀 흘려 지은 농사의 대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농민들이 추운 겨울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농민들과 함께 싸우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 등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역여성사 연구 통한 온전한 양성평등의 사회적 가치 구현’

도의회 ‘지역여성사 연구 활성화 위한 세미나’ 개최



지역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박용근·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역 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도민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타 지자체의 여성사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북자치도의회 지역여성사 발굴 및 재조명 연구회(대표위원 박용근)’가 마련했다.

진명숙 전북대학교 교수가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전북 여성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했으며, 함한희 (사)무형문화유산원 원장이 ‘전북여성사 쓰기 위한 기존 사례 검토와 제언’을 중심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박정민 전북대학교 교수, 백미록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미선 전북자치도 여성정책팀장, 허명숙 전 전북일보 편집위원이 지정토론을 했다.

이날 진명숙 교수는 “가부장적 억압과 피해, 그 안에서의 저항과 운동을 기록하려는 여성주의 역사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자위진 존재였던 여성, 기록되지 않은 여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은 남성 중심의 역사쓰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한 지역만들기’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함한희 원장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여성 중심의 역사가 쓰여야 하며 사건 중심의 정치사나 사회사

에서 벗어나서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체계나 관념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문화사로서 여성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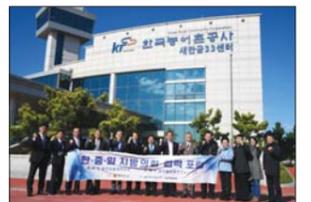
이어진 토론에서 박정민 교수는 “일단은 최대한 많은 생존자들의 구술 등을 확보하고, 이분들의 삶의 궤적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시적인 내용들도 복원해야만 전체적인 전북여성사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대 여성사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근 대표위원은 “지역 여성사를 보존·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가려진 여성사의 실체를 밝히고 온전한 양성평등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가기”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 지역여성사 발굴 및 재조명 연구회는 박용근·임종명·박정규·김희수·이명연·장연국·정종복·국주영은·오은미·진형석·윤수봉·윤영숙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만호 기자

“한·중·일 실질적 상호교류 확대 필요”

윤수봉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회 협력포럼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 완주)이 6일 전북 새만금 33센터 현장에서 “지방 진병(姜金兵) 중국 장수성 대표단장과 무로야 히로유키(室谷 弘幸) 일본 이시카와현 대표단장을 비롯한 양국 대표단의 전북특별자치도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동아시아 3국 지방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동아시아 3국 지방의회 협력포럼을 통해 관례적인 교류에서 명실공히 정치·경제·문화·교육·체육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호교류로 확대해 각 자매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은 “이번 포럼이 동아시아 3국 지방의회 간 지속 가능한 지방외교를 확대하고 교류를 통해 각 지역이 상호 발전하는 계

기가 되길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33센터 현지시찰에는 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김정기 의원(부안), 지방 진병 중국 장수성 대표단장 및 왕 지엔궈·쉬웨이잉·린진 중국 대표단과 무로야 히로유키 일본 이시카와현 대표단장 및 히모노 요시야키·아치 리츠오·바바 히로카츠·카메다 유타카 대표단, 국제협력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만호 기자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장수군의의회

의장
최한주 의원

부의장
유경자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김광훈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남수 의원

한국회 의원

장정복 의원

이종섭 의원

장수군의의회
JANGSU COUNTY COUNCIL

“지속 가능 축제 · 행사 되도록 힘쓰자”

유의식 완주군의회장 “시 승격 추진해 강력한 자치권 확보”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6일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10월 한달 간 완주군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를 성심껏 마련해 준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군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이 추진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서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적 도약의 기회이자, 완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완주군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완주 공동체의 정서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주는 일종의 문화 의식”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의장은 “앞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걸맞게 지속 가능한 축제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사업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특히, 유 의장은 “완주시 승격 추진은 완주군 인구 증가 추세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며, 무엇보다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더욱 강력한 완주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장은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완주 역사문화 정체성 개발 용역은 만경강과 만경강 유역의 역사·문화적, 생태적 의미를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완주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경제적 논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문화적 접근과 시선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의식 의장은 “두 용역 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도시 1번지! 주민자치 1번지! 완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대안적 담론의 장을 양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염태복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